

2026년 6·3지방선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과제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가족센터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경기도푸드뱅크 / 마켓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남부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사회복지연대 2026년 6·3지방선거 사회복지 정책과제

구분	정책과제	단체	페이지
공통 정책	1. 경기도 사회복지부지사 직제 신설	경기도사회복지연대	1
	2.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경기도사회복지연대	2
	3. 31개 시군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경기도사회복지연대	3
	4.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수립	경기도사회복지연대	4
	5. 경기도 시·군매칭사업 재정부담 정상화	경기도사회복지연대	5
	6. 경기도 AI 기반 지능형 복지서비스 통합플랫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6
아동 복지 정책	7. 아동종합심리평가 지원 사업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	7
	8. 고난도 아동 증가에 대응한 치료적 양육 기반 아동보호체계 구축	경기아동복지협회	8
	9. 요보호아동 맞춤형 발달지원사업 지속 및 확대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	9
	10. 아동그룹홈 시설장 정년 특례적용 및 호봉제 정상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남부지부	10
	11. 센터장 호봉 100% 적용 및 호봉제 개선	전국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협의회	11
노인 복지 정책	12. 경기도형 통합돌봄 수형구조 확립	노인분과	12
	13.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초기투자비) 예산 확대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13
	14. 노인 돌봄 공백의 이음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14
	15.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능 재정립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15
	16.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경기도형 노인복지관 적정 인력 배치'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16
	장애인 복지 정책	17. 경기도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체험 배우처 지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18. 직업재활시설 참여수당 지급(임금보조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8
19.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인착을 위한 '마음아름 교통 배우처' 도입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19
20. 경기도형 최중증 장애인 1:2 집중돌봄체계의 보편적 정착 및 국가책임제 실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20
21. 경기도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운영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21
지역 복지 정책	22. 아동·청소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및 고용 안정화	경기복지시민연대	22
	23.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23
	24.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 활용 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사업 확대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24
	25. 경기도 여성 노숙인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	25
	26.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호봉제 적용) 및 기능보강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	26
	27. 경기도광역가족센터 설치	경기도가족센터협회	27

□ **공통정책**

정책과제 1 경기도 사회복지부지사 직제 신설

■ **정책과제**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정무직 부지사 기능을 사회복지 전담으로 명문화
- 복지국을 복지실로 격상하고, 현장 경험과 정책 식견을 갖춘 민간복지 전문가 임명
- 경기도지사 직속 사회복지 특별보좌관 직제 신설

■ **필요성**

- 경기도는 경제부지사 직제를 처음 도입한 2012년 대비 2026년 복지예산 비율이 약 20% 증가되었으나, 복지부서 개수와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음.

구 분			2012년	2026년 (2024년)	증감
경기도 복지예산 비율			27.3%	47.2%	19.3%
시·도 분청 실·국 단위 복지부서	복지부서 개수	시·도 평균	1.2개	1.4개	9.5%
		시 평균	1.37개	1.6개	30.0%
도 평균		1.27개	1.1개	-9.1%	
경기도		3개	2개	-33.3%	
비중	복지부서 비중	시·도 평균	12.5%	9.7%	-2.8%
		시 평균	13.3%	11.4%	-1.9%
		도 평균	11.8%	8.2%	-3.6%
		경기도	20.0%	9.5%	-10.5%

* 복지예산 비율: 2026년 기준, 복지부서: 2024년 기준

- 복지행정은 복지 관련 부서뿐 아니라,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다른 부서와도 연계가 깊기 때문에,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조직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는 의료, 주거, 요양 등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간 연계와 총괄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소요예산:** 비예산

■ **제안단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 공통정책

정책과제 2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 정책과제

- 도단위 사회복지 직능단체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각 단체의 안정적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 필요성

- 경기도에는 많은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직능단체와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유관단체 등이 경기도의 민간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아울러, 직능 및 유관단체들은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시로 상호 네트워크하며 정책 의제 개발,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수행, 제도 개선, 협력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이러한 협력적 네트워크 실천은 '통합적인 행정관리 체계 마련'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지원'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통합적 행정관리 체계'는 동일한 정보체계망 속에서 정보에 대한 공유와 정책 및 제도 실현 과정에서의 협력 활동, 각 직능단체별로 연계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공생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지원'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들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와 함께 서비스 실천가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교육장, 전산교육장 등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능 및 유관단체들이 유기적인 상호 관계·교류를 형성하고 실시간 협의가 가능한 회의구조와 사무국 공간에 대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소요예산: 미정

■ 제안단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 공통정책

정책과제 3 31개 시군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 정책과제

- 31개 시·군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 필요성

- 이용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는 24.3%로 언어와 정서 폭력이 가장 많음. 또한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등을 경험한 종사자는 15.4%임. 폭력을 경험하였는데도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46.4%이고, 폭력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거나 있어도 대응이 없는 경우는 49.3%에 달함.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13.1%가 개인 비용으로 처리함.
- 이처럼 사회복지종사자는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보호와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
-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및 직무만족은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 특성 상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 권익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주요 사업대상인 사회복지종사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지역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권익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사업 참여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기반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시군 단위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수행이 필요함.

■ 소요예산: 6,200,000천 원

- 200,000천 원×31개소=6,200,000천 원
 - 1개소 당: 200,000천 원
(인건비 45,000천 원×2명=90,000천 원, 운영비 30,000천 원, 사업비 80,000천 원)

■ 제안단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 공통정책

정책과제 4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수립

■ 정책과제

- 사회복지시설 임금 상향평준화를 위한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수립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임금 기준 일원화

■ 필요성

- 사회복지 노동의 가치는 직무 특성에 기반하여 어디서나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함. 하지만 행정부서별, 시설별, 지역별, 사업지침별로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달라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함.
- 사회복지사 등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나 임의 조항에 불과하며, 현재 보수 수준은 공무원의 95% 수준에 그침.
-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지원시설은 개별 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인건비를 편성하다보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임.

〈국고지원시설의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임금 수준〉

평균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 시설	지역자활 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요보호아동 그룹홈	학대피해 아동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95.8%	96.7%	95.2%	96.1%	96.5%	94.1%	96.4%	94.5%	96.7%

- 사회복지 종사자의 서비스 숙련도와 전문성 증진은 복지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함.

■ 소요예산: 약 17,301,000천 원

- 직원급 추가 예산: 14,327,000천 원
- 시설장급 추가 예산: 2,022,000천 원
- 부장급 추가 예산: 952,000천 원

*2024년 기준 연간 추가 예산

■ 제안단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 **공통정책**

정책과제 5 경기도 시·군매칭사업 재정부담 정상화

■ **정책과제**

- 경기도와 시군 예산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도비 매칭사업들의 필요성, 당위성, 형평성, 효과성 등을 평가 및 우선 지원사업 등을 선정하여, 기준 도 부담비율을 30% 이상 보조하도록 하는 등의 차등 예산 수립 및 재원 우선 확보
- 도 부담비율이 10% 이하로 현저히 낮아 각 시군별 복지불균형이 심각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 부담비율을 30% ~ 50% 이상으로 보조하는 등의 차등보조율 개선

■ **필요성**

- 도-시군비 매칭사업 확장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고갈 가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등보조율 현실화로 각 시군별 재정자립의 지속가능성을 보조해야 함
 - 재정력지수 1, 재정자립도 50%, 재정자주도 50% 상회하는 등 상대적 재정이 우수한 시군이 5개 (성남, 화성, 용인, 하남, 수원)에 그침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이장욱 외,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25-43.
- 도비 10% 이하인 사업들은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제외하고, 현장에서는 사업종료 또는 일몰사업으로 인식되므로, 시군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 ※ “경기, 시군과 복지 매칭사업 생색내기 논란”안승순·명종원 기자, 2024. 3. 22,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322010003>
 -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경기도-시군 매칭 공모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도의 매칭예산 비율이 10% 이하인 사업은 총 4,068건 중 단 18건에 불과하고, 도 부담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은 826건 임(2025년 11월 11일 현재)
 - 총 사업비 308억 중 도비 116억, 그중 도 부담비율 50% 이상 사업은 59억 가량으로써,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군 현장에서의 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도 매칭비 부담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에 긍정적이나 이는 반대로 도 매칭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성, 지속가능성에 강력한 부정적 상황으로 귀결됨을 유추할 수 있음(일몰 또는 퇴보 우려가 있는 도내 복지사업 현황은 필요시 제출할 예정)
 - 일례로, 24년 전액 도비였던 “장기요양요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25년도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며 12개 지자체에서 중단되었음
 - ※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 예방접종', 1년 만에 도내 12개 지자체 중단”신연경 기자, 2025. 2. 5,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4142>

■ **소요예산:** 현 예산 내

■ **제안단체:** 노인분과

□ 공통정책

정책과제 6 경기도 AI 기반 지능형 복지서비스 통합플랫폼

■ 정책과제

- 경기도의 'AI 휴머노믹스' 비전을 바탕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실행할 AI 기반 지능형 복지서비스 통합플랫폼 고도화
- 기술(AI·데이터 메시)과 현장(시군·민간기관)을 연결하여 경기도민에게 '찾아다니는 복지'에서 '찾아오는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 필요성

- 신청주의 중심 복지체계로 사각지대 지속 발생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민간서비스 분절적 운영으로 중복수혜 발생
- 복지·보건·고용 등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한계 존재
- 취약계층의 복합적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으로 파악 및 접근 체계 부재
- 따라서 데이터 연계와 AI 분석을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복 서비스를 예방하며 시군과 현장이 실행하는 통합복지 운영체계 구축 필요

■ 내용

- 데이터 메시(Data Mesh) 기반의 분산형 데이터 통합 체계 구축
: 도메인 중심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가상화 기술 도입, 마이데이터 플랫폼 연계 등
- 시계열 딥러닝(RNN)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정밀 탐지
: 연속성 기반 행동 패턴 분석으로 위기징후 선제적 포착(소득 하락, 의료비 급증, 전기·가스 사용량 급변 등), AI 예측 모형의 설명력 강화(ADL)
- 복지·의료·고용 통합 '이행 경로' 분석 및 인센티브 설계
: 워크넷-행복이음 정보 실시간 연동, AI 기반 맞춤형 자립 지원계획(IAP/ISP) 수립
-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복지 상담 및 행정 자동화
: 공감형 생성형 AI 상담사 도입, RPA(행정업무 자동화) 적용
- 시군-현장 중심의 '연합 거버넌스' 사례관리 체계
: 사례관리협의체 네트워크 연계, 통합사례관리 회의 정보 환류

■ 소요예산: 구축 총 400억원 규모 추산

- * 정부의 AX Sprint(AI 전환 가속화) 사업(6,000억원 규모) 등 국비지원사업 연계 검토
- * 경기도 시비전예산 및 시군구 AI 관련 예산 활용 검토

■ 제안단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 아동복지정책

정책과제 7 아동종합심리평가 지원 사업

■ 정책과제

-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 초4, 중1, 고1)와 연계하여 경기도 초등학생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 초4) 결과 관심군 및 위험군 아동 대상 종합심리평가 검사비를 지원

■ 필요성

-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령 전환기 학생(초1학년, 4학년, 중1학년, 고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심군 및 위험군을 선별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에 확인 및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그러나 선별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관심군으로 확인된 아동 중 상당수는 2차 전문기관으로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그 과정에서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경제적 부담, 지역 내 전문기관의 접근성, 학교와 지역 간 연계 체계의 차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짐.
- 이로 인해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아동임에도, 일부는 적절한 평가와 개입으로 이어지는 반면, 일부는 결과 통보 이후 추가적인 지원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지원의 단절이 나타남. 이는 조기 발견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입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ADHD,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행동 문제뿐 아니라 경계선지능, 실행기능 저하, 사회성 미성숙 등 복합적 발달 특성은 선별검사만으로는 충분히 파악되기 어려움. 이러한 특성은 아동의 전반적인 기능과 일상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이해를 위해서는 종합심리평가를 통한 입체적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확인된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심리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개입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위와 같은 공공의 지원은 보호자가 비용 등의 부담 없이 아동 종합심리평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의 정서·행동 및 발달 특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가정 내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초기 개입의 효과를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임.

■ 소요예산: 연간소요액 4,578,800천원

- 종합심리평가 검사 대상 11,447명 × 400,000원 = 4,578,800,000원

*초등학교 1,4학년 221,040명/초등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11,447명(2025년 경기도교육청 자료)

■ 제안단체: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

□ 아동복지정책

정책과제 8 고난도 아동 증가에 대응한 치료적 양육 기반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책과제

- 고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치료적 양육 기반 아동보호체계 구축
- 생활지도원의 아동 감정 이해 및 행동 해석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 현장 중심 사례기반 양육 슈퍼비전 체계 구축

필요성

- 학대피해아동 및 특수육구아동 증가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심화
- ADHD, 경계선지능, 정서·행동 문제 등 복합적 육구 아동 증가로 기존 생활지도 중심 양육 방식의 한계 발생
-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생활환경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변화의 지속성과 확장에 한계 존재
- 고난도 아동의 경우 상담 및 치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일부 아동은 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 관계 형성 자체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지속적 개입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
- 특히 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인지 기반 상담 접근에 한계가 있어, 감각·신체·관계 기반의 경험적 개입 필요성 증가
- 아동의 문제행동은 생존을 위한 반응으로, 이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치료적 양육 접근 필요

소요예산: 500,000천원

생활지도원 치료적양육 전문교육운영	감정·행동이해기반 양육프로그램운영	현장 사례기반 슈퍼비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발비 1식 × 20,000천원 = 20,000천원 • 강사비 500천원 × 2시간 × 40회 = 40,000천원 • 교육 운영비(장소, 장비, 행정) 200천원 × 40회 = 8,000천원 • 교재 및 콘텐츠 제작비 10천원 × 2,000부 = 20,000천원 • 교육 운영 관리비 1식 × 22,000천원 = 2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1식 × 30,000천원 = 30,000천원 • 시설별 운영비 지원 2,000천원 × 80개소 = 160,000천원 • 평가 및 모니터링 비용 125천원 × 80개소 =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바이저 인건비 500천원 × 2명 × 100회 = 100,000천원 • 현장 방문 및 운영비 250천원 × 240회 = 60,000천원 • 사례회의 운영비 100천원 × 300회 = 30,000천원
소 계 : 110,000천원	소 계 : 200,000천원	소 계 : 190,000천원

제안단체: 경기아동복지협회

□ 아동복지정책

정책과제 9 요보호아동 맞춤형 발달지원사업 지속 및 확대

■ 정책과제

- 요보호아동 맞춤형 발달지원사업(심리·정서·인지발달 검사, 치료비 지원) 지속 및 확대

■ 필요성

- 요보호아동 중 경계선 지능, ADHD, 사회/정서/행동 발달지연 등 특수육구(고난이도 돌봄 필요) 아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2025년 마음건강돌봄사업비(시군비70%, 도비30%)로 지원되었으나 시군비 부담 비율이 높아 시군 예산상황에 따라 해당사업 도비지원여부가 결정되었으며, 기간한정 지원 정책으로 2026년부터 특수육구(고난이도 돌봄 필요)아동 치료 경기도 예산지원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시군의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은 상황임.
- 특수육구(고난이도 돌봄 필요)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개입(지속적인 예산지원 등)이 낮아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측면의 부담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이에 요보호아동 중 특수육구(고난이도 돌봄 필요)아동에 대하여 조기개입 및 지속적인 치료 등 맞춤형 발달지원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 등)이 꼭 필요함.

■ 소요예산: 1,728,000천원

- 필요치료비 월4회×회기당80,000원×12개월×450명=1,728,000,000원
(고난이도 보호아동 연간 1인당 3,840,000원 필요)
- 2024년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약 1,996명(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동복지현장의 추산치를 바탕으로 아동양육시설 요보호아동 중 경계선 지능 등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심리정서치료 개입 필요대상 아동) 비율을 약50%로 산정하여 예산 추산함.(2026년 3월 현재 A시설 27명 중 21명, B시설 34명 중 21명 등)
- 2024년도 기준 경기도내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전체 인원 약 912명 중 고난이도 보호아동 비율 50%(중복치료 포함 약450명) 적용
(참조) 2026년 3월, 경기도 아동양육시설별 고난이도 보호아동 비율이 20%~80% 수준임

■ 제안단체: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

□ 아동복지정책

정책과제 10 아동그룹홈 시설장 정년 특례적용 및 호봉제 정상화

■ 정책과제

- 아동그룹홈 시설장 원장급 70% 적용
- 시설장 정년 연장 특례 적용

■ 필요성

- 아동 그룹홈 시설장 과장급 경력 70% 적용으로 일반 종사자와 불균형
 - 아동그룹홈 호봉제가 적용된 지 3년이 지나고, 26년 선입사회복지사로 승급되는 종사자 발생. 시설장만 비정상적인 적용을 받고 있음.
- 정년 연장 특례 적용에서 시설장 제외로 또 다른 가정 해체
 - 아동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살아가는 생활시설로, 시설장이 주택마련(보증금 마련) 해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음.
 - 그룹홈에 종사하는 일반 사회복지사는 정년 60세가 지나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우면 정년을 5년 연장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업안내에 지자체에서 정년 연장 특례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결정하기는 부담이 있음. 정부차원의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경기도청의 결정이 필요함.

■ 소요예산

- 미제출

■ 제안단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남부지부

□ 아동복지정책

정책과제 11 센터장 호봉 100% 적용 및 호봉제 개선

■ 정책과제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장 경력은 호봉 산정 시 70%만 반영되어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서울 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어 지역 간 보수 격차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생활복지사는 경력 100% 인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승급 체계가 없어 장기근속 유인이 부족하고, 경력 개발 경로 부재로 인사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센터장 승진 기피 및 인력 운영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필요성

- 센터장 경력의 호봉 반영률을 100%로 상향하여 타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필요. 단기 적용이 어려울 경우 단계적 확대 적용 방안 마련.

〈2026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호봉에 따른 기본급 비교〉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적용기준	최대31호봉 서울시기준 4급 100%	최대31호봉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장급 100%	최대21호봉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장급 100%	최대7호봉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장급 100%	최대18호봉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장급 경력인정 70% 적용	최대13호봉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장급 100%	최대31호봉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장급 100%	최대12호봉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장급 100%	최대20호봉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과장급 100% *3호봉 이하고정	최대31호봉 제주도기준 1급 100%

- 생활복지사 직군 내 직급 체계 신설 및 근속연수·직무역량 등을 반영한 승급기준 마련 필요. 승급에 따른 보수체계 연계를 통해 경력개발 경로 확립 및 처우개선 추진.

■ 소요예산: 연9,567,600천원

- 시설장 788명 + 생활복지사 1,490명 = 2,278명
- 350,000원/월 * 2,278명 * 12월 = 9,567,600,000원

■ 제안단체: 전국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협의회

□ 노인복지정책

정책과제 12 경기도형 통합돌봄 수행구조 확립

■ 정책과제

- 통합돌봄 관련 기관 중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돌봄(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건강관리 및 예방)영역”의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
- 돌봄 영역에서 수행 가능 기관 가운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직접서비스)를 제외한 이동지원 및 동행, 상담 및 정보제공, 행정지원, 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의 기타 지원서비스의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

■ 필요성

- 통합돌봄은 지자체(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접수를 수행하고, 통합판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방문요양·간호·목욕 및 복지용구), 그리고 돌봄(식사 및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기타 지원서비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임. 다만, 돌봄 영역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및 지원·운영 계획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지역 간 편차가 큰 실정임.
- 이에 경기도 주관의 통합돌봄 모델을 수립하고, 시·군과의 협의 및 예산 차등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군 간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민 전체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1,400만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 시행 원년으로서 사업의 조기 정착과 복지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소요예산: 예산 범위 내

■ 제안단체: 노인분과

□ 노인복지정책

정책과제 13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초기투자비) 예산 확대

■ 정책과제

- 시장진입형 공동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개발
-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초기투자비 등)의 도의 예산 매칭 비율을 높여 많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현재 경기도50% / 지자체50%) → **(경기도60% / 지자체40%)**
-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사업 1개소당 최대 지원금액 확대
(2025년 1.5억 / 2026년 1.23억) → **(최대 1.8억~2억 까지 증액)**

■ 필요성

-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형(공동체사업) 일자리 활성화 필요, 하지만 공동체사업의 경우 대부분 초기투자비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
- 경기도의 초기투자비 지원으로 타 도(道)보다 공동체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나, 지자체 자립도가 낮아 예산 책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초기투자비 추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으로써 경기도의 예산 매칭 비율을 높여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사업이 활성화된 2017년도의 사업 1개소당 최대1.5억의 예산지원이 되었으나 2026년 현재 최대 1,23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임, 2017년부터 2025년도 까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19.9%(출처: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된 것을 감안하여 초기투자비 지원금액도 확대되어야 함.

■ 소요예산 : 1,094,500천원

구분		현재(2026년기준)	제시(안)
지방비 매칭 비율		경기도50% / 지자체50%	경기도60% / 지자체40%
지원금액(기준1억5천만원)		18.4%감소	20% 증가
예산 (초기투자비)	개소	122,450,000원	180,000,000원
	총 예산	829,100,000원	1,094,500,000원
이전예산 비교		2024년	2025년
		980,950천원	1,515,525천원
		2026년	829,100천원

■ 제안단체: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 노인복지정책

정책과제 14 노인 돌봄 공백의 이음매

■ 정책과제

- “끊김없는 돌봄, 이어지는 일상”, 노인 돌봄사각지대가 만든 공백의 이음매
- 정부 주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단 주도의 장기요양보험에서 놓치고 있는 돌봄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경기도형 노인 돌봄공백해소 정책이 필요함
- 돌봄공백 대상자(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탈락자와 대기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을 활용한 노인 돌봄공백해소
 - 경기도조례 제 6092호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필요성

- 경기도 내 노인 돌봄공백 대상자(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탈락자와 대기자)는 매년 5만명 이상으로 추정됨.
 - 경기도 노인인구 200만 명
 - 경기도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신청자수 연 30만 명
 - 전국 등급인정률 약 80%
 - 경기도 등급 비인정자(탈락자) 5만 명
 - 이에 등급 인정자 중 미이용자, 잠재수요군(대기자) 등을 더하면 15만 명 이상
- 통합돌봄서비스 수행영역 중 ‘의료’ 및 ‘장기요양보험’ 영역과 달리, ‘돌봄’ 영역은 식사 및 가사 지원 중심의 직접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에도 일상생활 지원, 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예방,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환경 개선,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사례 대응 등 다양한 기타 지원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그러나 해당 기타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는 현재 미흡한 상황으로, 서비스 공백 및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운영 중인 21개 시·군, 50개소의 재가지원서비스센터 및 약 250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중심으로 수행기관을 지정·육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수행체계 구축은 별도의 대규모 신규 인프라 확충 없이도 단기간 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 및 통합돌봄 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해야 함.

■ 소요예산: 연간 360억 원

(서비스 인력 시급 15,000원, 1일 2시간, 주 2회, 3개월 돌봄제공 기준,
대상자 1인당 3개월간 720,000원 소요, 경기도 대상자 5만 명 추정시)

■ 제안단체: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 노인복지정책

정책과제 15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능 재정립

■ 정책과제

-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처우개선비·웰빙보조비 등 지원 대상에 포함(단계적 확대)
-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장기근속휴가 지원 대상 확대(취약지역 우선 지원)
- 노인요양시설을 ‘중간집(케어안심주택)’ 수행주체로 제도화하여, 퇴원환자 단기보호·재가복귀 지원 등 지역 통합돌봄 거점 기능 부여

■ 필요성

- 현행 제도상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처우개선 지원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 동일 돌봄서비스 수행에도 시설 유형·지역에 따라 처우 격차 발생
 -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력 이탈 및 신규 인력 확보 어려움 심화
 - 특히 농어촌·도서지역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돌봄 공백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종사자 처우 개선은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 고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공실률 증가 및 지역 간 수요 불균형 심화
 - ▶ 농어촌·취약지역 시설은 접근성 및 인력 문제로 운영 위기 심화
 - 기존 시설이 통합돌봄 체계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 발생
 - 신규 인프라 확충보다 기존 시설 기능 전환이 예산 및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효과적
 - 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공실 해소, 운영 안정화 및 지역 돌봄체계 강화 가능

■ 소요예산: 총 1,266,790천 원

-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 종사자수당 월50,000원 X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3,643명 = 182,150천원
 - ▶ 웰빙보조금 월20,000원 X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3,643명 = 72,860천원
-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장기근속휴가 지원
 - ▶ 대체인력지원사업 8시간 112,420원(시급12,552원, 교통비, 식비포함) X 경기도내 취약지역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약 500명(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등) X 평균 연차(8시간) 18개 = 1,011,780천원

■ 제안단체: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 노인복지정책

정책과제 16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경기도형 노인복지관 적정 인력 배치'

■ 정책과제

- **경기도형 표준 인력 배치 기준 수립:** 노인 인구수, 복지관 규모(예산, 사업량, 회원 수)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인복지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보건·의료 전문 인력(간호사) 시범 배치:** 응급 초기 대응 및 일상 건강관리를 위해 경기도 4개 권역 거점 복지관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고, 1년간 성과 측정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전문 인력 확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 전문가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 배치 지원
- **기관장 겸직 구조 개선:** 주간보호센터장을 겸직하는 기관장의 과도한 상근 의무 및 행정 책임에 대한 유연한 기준 마련 및 직책 수당 신설

■ 필요성

- **인력 기준의 노후화:** 20~30년 전 수립된 인력 기준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급증하는 이용자와 고도화된 서비스 수요(통합돌봄, 디지털 교육 등)를 감당하기 역부족임.
- **의료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일일 8만여 명이 이용하는 경기도 노인복지관에 간호 인력이 없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임. 영유아보육법(간호사 의무배치) 등 타 시설 사례와 비교 시 형평성 제고가 시급함.
- **업무 과부하 및 소진:**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1인이 평균 200명 이상의 어르신을 관리하는 등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인해 종사자 소진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함.
- **지역 및 직종 간 차별:** 지자체마다 상이한 인력 적용으로 인해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며, 서울시(기본 24명 배치) 등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 소요예산: 총 500,000천 원

- 노인복지관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250,000천 원
- 간호사 시범배치 250,000천 원

■ 제안단체: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장애인복지정책

정책과제 17 경기도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체험 바우처 지원

■ 정책과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체험 바우처 지원

- 거주시설 장애인 대상 월 5만 원 자립 체험 바우처 지급
 - 대중교통, 생활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 등 지역사회 이용 활동비 지원
 - 외부 활동 동행 직원(종사자)에 대한 공적 활동비 지원체계 마련
 - 개인별 이용 계획 수립 및 사용 관리 체계 구축
 - 장애인시설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 단위 통합지원 기준 적용
- *거주시설 장애인·재가장애인 및 시설 유형 간 이용 기회 불균형 완화

■ 필요성: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 부족 구조 개선 필요

- 거주시설은 인건비·생계비 중심의 예산 구조로 외부 활동 재원이 구조적으로 부족
 - 자립 체험 활동 시 이용자(장애인)와 동행 직원(종사자 등)이 함께 활용 가능한 자원 지원체계 필요
- 후원금 의존 구조로 시설 간 서비스 수준 및 이용 기회 격차 발생
- 현행 구조에서는 단편적 외부 활동에 그쳐 자립 역량 형성에 한계 존재
 - 동행 직원 또한 공적 지원 없이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 미흡
- 장애인의 경제적 자기결정권 제한으로 개인 선택 기반의 활동 참여 제약
- 지역사회 전환 정책 확대에 비해 실질적 체험 및 준비 기회 부족
 - 거주시설 이용자(장애인)과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 지역사회 경험 지원을 통하여 자립에 대한 꿈과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필요

■ 소요예산: 총 540,000천 원

- 세부내역 : 50,000원 × 900명 × 12개월 = 540,000천 원
- *거주시설 거주장애인 약 4,500명 중 약 20% 반영

■ 제안단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장애인복지정책

정책과제 18 **직업재활시설 참여수당 지급(임금보조제)**

■ **정책과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참여수당 신설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임금보조적 성격) 지급
- 제도적 역차별 해소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공공일자리 및 권리 중심형 일자리 참여자 간의 소득 격차 완화
- 노동 지속 가능성 확보
 - 단순 복지급여를 넘어 장애인의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 **필요성**

구분	주요 내용
임금 역차별 해소	공공일자리 참여자와의 극심한 소득 격차 및 제도적 역차별 완화
생존권 보장	경기도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약 49만 원 수준의 빈곤 해결
시설 부담 완화	생산성 한계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유지 지원
글로벌 기준 부합	UN 권고 및 선진국 수준의 보충급여제 도입을 통한 정책 선진화
삶의 질 향상	노동 가치 인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 기여

■ **소요예산:** 27,300,000천 원

- 참여수당 650,000원(일 3시간, 최저임금) × 3,500명 × 12개월
 - 주간 최소 근로시간 15시간(하루 3시간) 적용
 - 3,500명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시설 이용 근로장애인 수
 - 시·군70%, 도30% 매칭 추진

■ **제안단체:**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장애인복지정책

정책과제 19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마음이음 교통 바우처’ 도입

■ 정책과제

- 경기도 정신질환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바우처 지원 도입

■ 필요성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장애 등록 기피 현상 지속,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접근 제한 구조 존재
- 전국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약 46만 명 대비 정신장애 등록자 약 10만 명 수준으로 등록률 약 20% 수준에 불과
-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23,733명 대비 정신장애 등록자 약 13,000명 수준으로 추정, 등록률 약 54% 수준으로 상당수 제도권 복지체계 밖 존재
-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교통·의료·소득보장 등 복지서비스 차등 적용 구조, 미등록 정신질환자 서비스 접근 불리
-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주 2~3회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나, 교통비 부담은 이용 중단 요인으로 작용, 특히 외래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 시 반복적 이동이 요구되어 교통비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
- 재활서비스 이용 시 버스·택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 저소득 정신질환자 비중을 고려할 때 이동비용 부담이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제한 요인으로 작용
- 정신질환자 이동권 보장은 치료 지속성 확보, 증상 악화 예방, 재입원 감소를 통한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따라서 이동권 보장은 선택적 복지 차원을 넘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필수 기반 정책으로서 도 차원의 선제적 도입 필요

■ 소요예산: 7,590,000천 원

- 바우처 지원비: 7,440,000천 원(교통 바우처 20,000명 × 31,000원 × 12개월)
 - 산출근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23,733명(2024년 기준)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중 고려, 실제 재활서비스 이용 및 사례관리 대상군 비중(약 80%) 반영하여 20,000명 산정
 - 산정기준: 주 2~3회 이용 기준, 1회 왕복 평균 교통비 약 2,500원×월 평균 12회 적용 시 약 30,000원 수준이며, 교통요금 변동 등을 반영하여 월 31,000원 기준 적용
- 시스템 연계 및 운영비: 100,000천 원(기존 교통정산 시스템 활용 및 관리)
- 홍보 및 대상자 발굴비: 50,000천 원(31개 시·군 대상 안내 및 홍보물 제작)

■ 제안단체: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 장애인복지정책

정책과제 20 경기도형 최중증 장애인 1:2 집중돌봄체계의 보편적 정착 및 국가책임제 실현

정책과제

- 경기도형 중증 전담반 성공 모델의 기존 주간이용시설 내 보편적 구조 정착
- 최중증 이용인 1:2 전담 배치를 통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선도 모델 구축
- 서비스 다변화에 따른 유휴 정원 활용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예산 절감형 돌봄 안전망 고도화

필요성

- **현행 '중증 전담반' 사업의 구조적 진입 장벽 및 사각지대 발생**
경기도의 '중증 전담반' 사업은 별도 공간 확보 등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다수 시설이 참여 자체가 어려운 구조임. 이로 인해 일부 시설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87개소 전반에 분포된 최중증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 **서비스 유형 간 인력배치 기준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동일한 낫활동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 기준이 주간이용시설 1:3, 주간활동서비스 1:2.5, 최중증 통합돌봄 1:1로 상이함. 특히 최중증 이용자가 증가하는 주간이용시설에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안전관리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특성 기반의 기준 개선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정부 주도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점 돌봄 체계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기도 내 87개소 시설 조사 결과 전체 이용인의 37.8%(629명)가 최중증 장애인으로 파악됨. 이는 이용자 10명 중 약 4명이 상시 밀착 케어가 필요한 최중증(도전행동, 뇌병변) 장애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종사자 1인이 3.6명을 담당하는 현행 배치는 물리적·안전적 한계가 분명함. 그러므로 경기도의 전담반 모델을 기존 시설 내 '1:2 집중 돌봄 구조'로 보편화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국적인 최중증 돌봄 표준을 선도해야함.
- **인력 운용의 유연화를 통한 예산 효율성 및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급격한 다변화로 기존 시설의 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 신청자의 대다수가 최중증 및 고령 장애인으로 국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원 미달 문제를 시설의 운영 역량 부족으로 치부하기보다 구조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유휴 정원을 전담 키퍼로 전환하고 자연 감소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추가 예산 없이도 돌봄의 질 향상과 정책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소요예산: 1,113,600천 원

- **최중증 전담 전환 시설 운영 지원금: 960,000천 원**
- 산출근거: 32개소 × 30,000천원 = 960,000천 원
- **전담 인력 특수업무 수당(기존 인력 전환): 153,600원**
- 산출근거: 64명(32개소 × 시설당2명전환) × 200천 원(월 수당) × 12개월 = 153,600천원
※ 조사된 시설 수 87개소 중 1:1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4인 이상인 시설 32개소(중증반제외) 우선 도입을 근거로 산정된 소요예산

제안단체: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 장애인복지정책

정책과제 21 경기도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운영

■ 정책과제

- 장애인 통합돌봄 및 자립지원 정책의 실행체계로 **장애인복지관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장애인통합지원 센터를 구축·운영**
-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및 통합사례관리, 생애주기 전환지원, 가족지원, 주거전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장애인중심·지역중심 전문 전달체계 확립**

■ 필요성

- **[장애인 중심 통합돌봄 미흡]** 현재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유형 및 연령별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생활, 사회참여, 행동지원, 가족지원 등)를 반영하지 못함.
- **[전달체계 단절과 분절]** 장애인 돌봄은 교육, 자립,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달체계는 사업 중심으로 분절 되어 정책 효과성이 저하됨.
- **[지역중심 지원체계 미흡]**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보호자 고령화 및 부재 상황에서의 위기대응 등 생애주기 전환 지원체계 미흡으로 가족부담 지속 증가
- **[지역 및 서비스 품질 격차]** 지역 간 서비스 인프라 및 접근성 격차로 인해 동일한 정책이라도 체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통해 주요 정책(통합돌봄+자립지원)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소요예산: 12,500,000천 원

- **광역센터(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조직) 예산 : 800,000천 원**
 - 인건비 4명×50,000천 원×2개소(남부, 북부) = 400,000천 원
 - 운영비 및 사업비 200,000천 원×2개소(남부, 북부) = 400,000천 원
- **지역센터(장애인복지관) 예산 : 11,700,000천 원(300,000천 원×39개 소)**
 - 인건비 4명×50,000천 원×39개 소 = 7,800,000천 원
 - 운영비 및 사업비 100,000천 원×39개 소 = 3,900,000천 원
 - * 지역센터는 신규인력 중 간호사 1명 필수, 복지관 조직개편을 통한 추가 인력배치 유도
 - * 지역센터는 기초단체와 매칭예산으로 편성하여 소요예산 절감 검토(50%매칭 총 6,650,000천 원)

■ 제안단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

□ 지역복지정책

정책과제 22 아동·청소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및 고용 안정화

정책과제

- 지속적 사업수행을 위한 '중장기 고용 계약' 체결 추진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경기도 교육청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 전담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인력 수급 및 관리 자구책 마련
- 경기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이행하여, 전국 하위 수준(10.9%)의 배치율을 임기 내 25%(281개교 →645개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학교 현장의 유일한 단기 계약직 신분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고용 가이드라인 배포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수단' 지급 및 호봉제 현실화

필요성

- 학교사회복지의 핵심은 학생·가정과 쌓은 깊은 신뢰 관계이나, 잦은 인력 교체는 위기 학생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사례관리의 질을 저하시킴
- 초·중등 위주의 배치로 인해 위기 징후가 심화되는 고교 단계에서 서비스가 단절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성장 주기별 단절 없는 '경기도형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지자체 예산 중심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탈피하여,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안정적 인력 관리 모델 정립이 시급함
- 2025년 기준 경기도 배치율(10.9%)은 전국 평균(17.7%) 및 인근 인천(41.4%) 대비 현저히 낮아 경기도 학생들의 복지 수혜권에 대한 역차별 발생
- 도내에서도 일부 지자체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기도민의 거주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망 수준이 결정되는 불평등 구조임

2025 전국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체 학교	1,310	617	455	544	314	306	243	105	2,580	633	482	726	752	843	933	986	200	12,029
사업시행교	312	141	124	225	88	61	37	9	281	87	42	67	201	100	85	98	26	1,984
지정비율	23.8	22.9	27.3	41.4	28.0	19.9	15.2	8.6	10.9	13.7	8.7	9.2	26.7	11.9	9.1	9.9	13.0	17.7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지자체 학교사회복지사업 + 민간지원사업

2025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현황

	과천	군포	성남	안양	용인	의왕	수원	구리	양평	동두천	계
초중고학교	13	47	161	88	190	29	210	160	44	23	965
사업시행교	13	8	30	6	6	6	58	1	1	1	130
지정비율	100	17.0	18.6	6.8	3.2	20.6	27.6	0.6	2.3	4.3	13.5

출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2025. 7. 29.)

소요예산: 33,540,000천 원

- 52,000천 원×645개교=33,540,000천 원(1개교 당 인건비 + 운영비 : 52,000천 원)

제안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 지역복지정책

정책과제 23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 정책과제

- 경기도내 89개 종합사회복지관 3대 영역 사업 진행을 위한 도비 운영비 확보
- 경기도내 사회복지관에 도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필요성

- 경기도 31개 기초단체마다 89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복지관 운영의 어려움
 - 시·군별 재정 자립도 격차가 있어 기초단체 별로 운영비 지원 수준이 상이하고 기존 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복지 불균형을 초래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경기도 내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 지원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고 있음.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역사회 복지의 거점이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인 사회복지관에 대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음.
- 경기도내 3종 복지관 도비 지원 현황

구분	경기도 예산 지원 금액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항	회원기관
종합사회복지관	無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89개소
노인종합복지관	50,000,000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67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70,000,000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9개소

■ 소요예산: 8,900,000천 원

-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 100,000천 원 × 89개소 = 8,900,000천 원

■ 제안단체: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 지역복지정책

정책과제 24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 활용 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사업 확대

■ 정책과제

-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 전체 폐소형가전 수거함 비치 및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 필요성

- 한국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3년 978만 톤으로 연평균 7.1% 증가하고 있음. 현 추세라면 2030년에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00만 톤 이상 될 것이며 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이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의 핵심 목표임. 2025년 말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약 1,300개에 달하며, 하루 평균으로 하면 3.5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 여기에 물건 구매 등을 포함하면 1인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더 많고,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음.
- 2025년 11월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근거로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여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함.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을 순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함. 폐소형가전의 경우 플라스틱과 여러 광물이 결합된 형태로 수거와 분해 등을 통해 재활용을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한 경기도 전역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자활사업을 활용하여 수거 체계를 마련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와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함.

■ 소요예산: 990,000천 원

- 폐소형가전 수거함 비치 300천 원×100개×33개 시·군=990,000천 원

■ 제안단체: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 지역복지정책

정책과제 25 경기도 여성 노숙인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 정책과제

- 경기도립 여성 노숙인 복지시설(일시보호 및 자활) 설치
- 경기도 특화된 여성 노숙인 자활(일자리, 주거) 및 재활(의료, 보호)의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 필요성

- 경기도 여성 노숙인 증가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 필요
 - 수원, 성남, 의정부시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중심 여성 거리 노숙인 발견인원의 경우 '22년 122명, '23년 123명, '24년 117명, '25년 16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2021년 전국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거리노숙의 원인은 실직(21.3%), 질병(17%), 가정폭력(15.2%) 순으로 남성 노숙인보다 서비스 지원의 특수성을 보이며 성추행 등 범죄피해 현황도 거리에서 45.7%로 위험도가 높음(출처: 보건복지부).
 - 이는 경기도내 증가하는 여성 노숙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입증함.
- 경기도내 여성 노숙인 지원시설 부재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발생
 - 질병, 장애 등 재활·요양(도내 4개 시설 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시·도단위별(서울 9, 인천 1, 충청도 1, 경상도 5, 전라도 1, 강원도 1) 경기도의 경우 유일하게 여성 노숙인 응급보호 및 자활시설이 미운영됨.
 - 여성 노숙인 시설의 부재는 전문적 복지 서비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장애로 이어짐.
- 경기도내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필요
 - 2022년부 중앙정부의 노숙인 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소극적인 여성 노숙인 지원체계는 거리노숙 만성화 및 고착화로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및 증가추세를 가속시킴.
 - 이에 따라 경기도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타 광역시·도와는 차별화된 여성 노숙인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초가 되는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함.

■ 소요예산: 465,600천 원

- 인건비: 74,080천 원×5명= 370,400천 원
- 운영비: 25,200천 원
- 사업비: 70,000천 원

■ 제안단체: 경기도인천노숙인시설연합회

□ 지역복지정책

정책과제 26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호봉제 적용) 및 기능보강

■ 정책과제

- 호봉제 시행(현재 급여 수준 낮추지 않고 적용)
- 수당 및 상여금 지급(시간 외 근무수당, 위험 수당, 상여금)
- 물류 보조장비 지원(이동식 벨트컨베이어, 소형 지게차 등)

■ 필요성

- 물류가 업무의 중심이어서 장시간 운전, 물품을 상하차 하면서 잦은 부상과 사고 위험
- 과도한 행정 업무와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안 됨.

■ 소요예산: 3,040,000천 원

- 경기도 내 80개소 당 인력 1명(코디네이터) 추가배치 총 80명
인건비 : 38,000천 원×80명 = 3,040,000천 원
- 기능보강비(물류 보조 장치) 개소 당 1건 80건

■ 제안단체: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

□ 지역복지정책

정책과제 27 경기도광역가족센터 설치

■ 정책과제

- 경기도 가족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광역가족센터 설치

■ 필요성

-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 규모와 31개 시·군의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가족정책 수요가 매우 크고 지역별 편차도 뚜렷함. 아동·청소년, 노인, 1인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증가하면서 기존 시군 가족센터만으로는 광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특히 경기도는 1인가구와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돌봄 수요가 전국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가족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관리, 지역 간 격차 해소, 종사자 역량강화, 특화사업 개발이 함께 요구됨. 그러나 현재는 시군센터별 여건과 역량에 따라 사업 운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도 차원의 기획·지원·조정 기능이 필요함.
- 따라서 경기도광역가족센터는 31개 시군 가족센터를 연결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가족정책 수요 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군센터 컨설팅, 종사자 교육, 성과관리, 통합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를 통해 경기도민이 거주 지역과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전문적인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결론적으로 경기도 광역가족센터 설치의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경기도 가족정책의 전문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기반임. 경기도의 인구 규모와 복합적인 가족정책 수요를 고려할 때, 광역 단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정책과제임.

■ 소요예산: 미정

■ 제안단체: 경기도가족센터협회

2026년 6·3지방선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과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